

Humel

녹색소비자연대 2001-12-13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 양식 리우+10과 녹색소비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지구환경문제의 일차적인 근본원인이 천연자원의 과다추출, 소모품의 과다생산, 과다소비, 그리고 과다폐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지구환경보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02년 9월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일명 리우+10이라고 불리우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릴 예정이다. (WSSD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로 환경부가 정함)이 회의에서는 '92 리우지구정상회의(UNCED)에서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의 10년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우선과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 회의에 대비해 녹색소비 문제를 중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구환경문제의 핵심과제를 포착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오늘의 지구사회의 난제로 남아 있는 녹색생활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모델 또는 정책대안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와 NGO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상을 보면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 대열과 개도국사이의 소위 선발 개도국의 애매한 입장과 무임승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서 국제사회로부터 의무에는 소극적이면서 수혜를 기대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가 하면 NGO들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나 아직 국제사회의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문명과 문화의 향방을 바로 잡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처지였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 일각에서 WSSD에서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면 1992년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협의된 의제21이 선진국 주도하에 서구위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 정부들의 논리와 로비력이 강한 반환경적인 집단들의 입김으로 많은 주요 사안들이 누락된 사실을 읽어내고 이들의 보완을 위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등이다.

국면전환은 물론 한나라가 또는 한 NGO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NGO,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 국내 NGO의 연대, 동북아권의 네트워크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WSSD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작금의 국제사회현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힘의 행사, 생명경시, 물질만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성장과 경쟁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익추구가 지배하는 신제국주의가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WSSD라고 해서 크게 기대할 것은 못된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녹색소비자연대가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 포럼에서 리우+10과 녹색소비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기초발제자의 녹색생활문화 형성이라는 차원 다른 녹색소비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성의 한계이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녹색소비자연대가 리우+10회의를 전후해서 추진할 녹색생활문화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각설정에 참고가 되는 기본 문제제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92년도 리우지구정상회의 참가, 지방자치체들의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오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 참여, 그리고 녹색소비생활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에서 얻어진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II. 한국시민사회와 지구환경가버넌스

지구환경가버넌스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적 개념과 지구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지구환경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공유자산(Global Commons)인 국제 공공재의 운영관리는 국가정부들의 대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인류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지구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Governance를 공치 또는 협치라고 하고 있음)

이것은 1992년 출범한 지구협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에서 펴낸 <우리 지구촌 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에서 주창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전세계의 28명의 석학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출범 당시의 공동위원장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 스웨덴의 앙바르 칼손 수상, 영연방의 슈리다스 람필 사무총장이었다. 현재는 작고한 브란트수상을 제외한 두 공동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가버넌스 개념의 특징의 하나는 지구환경문제 대처에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종래의 주행위자인 국가와 유엔기구에 더해 NGO,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등의 경제 및 사회조직, 학계, 언론 그리고 지방정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NGO의 중심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선진국 주도의 1972년도의 UN 인간과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본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주행위자인 국가와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방책강구를 하지 못한다

서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가버넌스가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에 있다. 지구협치위원회가 설정하고 있는 가치관은 민주주의, 자유, 정의, 공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치관에 합치하는 1990년대의 규범적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행위자로 중시되고 있는 NGO들의 국제적인 활동에서 보면 이들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에 얽매임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국가간의 또는 남북간의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는 NG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NGO는 지금까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감시활동, 여론제기, 정책추진 독려, 청정생산 및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외적인 압력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현격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인정도 확실해지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NGO의 협력을 얻기 위해 1990년 6월에 국제추진위원회(International Facilitating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NGO의 연락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UNCED에 있어서는 제4차 준비회의에서 협력관계가 결렬되어 리우에서는 NGO별도의 포럼과 지구헌장, NGO 의제21 등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1997년 6월 개최된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리우+5)에서는 NGO대표가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와 나란히 본 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었다. NGO들은 현재 각 국가의 의제21의 실천성과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다.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은 유엔에서만 아니다. 1997년도 노벨평화상이 대인지뢰전금지조약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NGO인 <지뢰금지국제캠페인-ICBL>과 그 책임자인 죠디 윌리엄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의 예이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민운동의 비영리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을 이룰 가장 적합한 세력'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정치, 경제권력을 변화시킬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시민단체를 정부, 의회, 법원, 언론에 이어 제5권부로 칭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의 시민사회는 지구환경가버넌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 갖추기(Empowerment)란 틀 바꾸기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인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현존의 잘못된 구조와 체계의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민으로부터의 개혁' '민간단체가 지역을 바꾼다' '시민운동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데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잠재력 평가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작금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붙여 넣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집단은 시민사회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여건과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자리잡지 못함으로 해서 비록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등의 꼬집힘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시민사회는 다른 나라의 NGO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형의 생활개혁, 사회개혁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5년부터의 지방자치=환경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행정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라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행정의지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종래의 행정대상 또는 관리대상에서 행정의 파트너로 변신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첫 과제로 추진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민과 관의 파트너십 관계가 뿌리내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존민비, 관은 시혜자 민은 수혜자라는 관념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과 관이 행정주체로서의 대등한 관계인 파트너십 구축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갈등을 겪으며 점차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갈길이 얼마나 먼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산위에 올라가 보아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를 위해 여러번 산에 올라가 본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①시민의식이 투철한 시민의 수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조직 규모의 문제 ②공익활동에 필요한 재정조달의 문제 ③취약한 재정으로 전문인력 확보 부족 ④정부와 기업 등의 정보독점의 문제 ⑤갈등해소에 필요한 정교한 교섭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목적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은 ①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위기관리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Volunteerism의 고양 ②시민, 기업, 정부간의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정립 ③정보 공유 확대책 마련 ④사회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⑤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⑥사회와 행정의 감시기능 강화 ⑦실천주체로서의 조직강화 ⑧운동방식의 성숙화 ⑨국내외 연대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는 시민의 세기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주체적으로 역사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하는 변혁의 시점에 놓여 있다. 사회변혁의 원동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각자가 자율적인 주권자로서 다원적인 통로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지구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III.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소비 생활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대로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충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이 주창한 <세계자연보전전략>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그 후 일명 브룬트란드 위원회라고 불리우는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의 기초 개념이 되었으며 1992년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인류 공통의 명제로서 확인되어 명목상에 불과하지만 현재 경제, 사회, 정치적 정책 결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유엔은 1992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해마다의 의제21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 기구에 우리나라의 국가의제21수립 이전부터 이사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1996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가 이 위원회의 이사국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93~'95년 그리고 '99.5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2000년 9월부터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구성되었으며 서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이 기능을 부여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은 정부의 모든 개발정책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사전심의하게 하는데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개발정책과 통합적으로 집행한다는 데 있다.

세계는 지구환경 가버너스를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 개최,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국제협약 체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관련 국제법 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환경은 1984년부터 해마다의 지구백서(State of the World)를 펴내고 있는 월드워치(World Watch)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구시민 모두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제3차 지구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UNEP에서도 리우회의로부터 10년간 그리고 스톡홀름부터의 30년간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문제들은 계속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을 환경활동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인 녹색소비생활 문화가 구현되지 못한데서 찾고 있다. 그것은 유엔의제21의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녹색생활양식 또는 녹색소비에 대한 기초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미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녹색소비자포럼2'에 실려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자 운동'이라는 필자의 글에서도 설명되어 있음)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어떻게 녹색생활양식 또는 녹색소비를 문화로서 뿌리내려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현세대인을 휘어잡고 있는 물질적인 욕구를 정신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가치관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기반이 되는 윤리관은 일상적인 건전한 생활결단과 실천에서만 형성된다. 녹색소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동반하며 그 진전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녹색소비생활양식이 문화로서 자리잡게 하는데에는 개개인의 생활실천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가능케하는 정부의 정책지원, 정책결의 구조 개편, 행정의 운영관례와 생산구조, 언론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국제 경제, 사회구조 및 체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의 역할은 오늘의 상황에서는 지구시민사회 몫으로 보인다.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양식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벌써부터 빼놓을 수 없는 국제회의의 의제였으나 성과가 없었던 터에 오는 WSSD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되어질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렇게 짐작하게 하는 데에는 영국의 UNEP가 WSSD의 준비자료로서 그 회의에서의 쟁점사항들을 묶어 펴낸 <뉴딜-A New Deal>이라는 책자에 실린 물리 미카엘리스의 <지속가능소비와 생산>이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옥스퍼드의 지속가능소비위원회의 조사연구 책임자로서 현재 제3차 지구정상회의에 제출할 지속가능 소비의 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의제21 제4장의 실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생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을 도모하는 일 ② '번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그의 쟁점은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요소로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후자의 도전인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간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 녹색소비자연대의 오늘의 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 간추려 본다.

그는 우선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결과를 예시하면서 그가 제기한 문제는 ①오늘의 생산과 소비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데서 현 시장 경제체제가 개인간의 국가간의 불평등성을 촉진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러한 미국이 앞장서온 선진국형 경제모델이 전 세계에 파급되는 현상을 우선 경계하고 있다 ②인간의 삶의 보람은 물질적인 것에서만 찾는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서 사랑, 지역공동체, 영적 영역, 배움, 환희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TV의 상업광고를 필두로 하는 언론매체들의 과급력으로 사람들을 물질적 소비에 매몰되게 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③세계화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양식이 획일화 또는 표준화되면서 지역특성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노동과 소비'만을 반복하는 생활양식에 묶어둠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있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가치관, 사회윤리, 제도 변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와 토론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실천을 견인해내는 일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 이유를 유엔기구나 OECD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술혁신과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소홀히한데 원인이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자원소비와 환경영향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는 비교적 용이한데 비해 주관적이고 질량적인 사회적 또는 문화적평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래의 '번영'에 대한 인식은 주로 물질적인 충족과 관련짓기 쉽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그들의 건강, 가족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안정도 사람들이 중시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적인 소비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욕구충족을 가능케하는 번영으로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①'이만하면 됐다'라는 한계가 있는 만족감을 되살려

내는 일 ②참의미의 만족감은 인간관계에서 찾는 일을 강조하는 것 ③개인의 성장, 사회발전, 또는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을 풀어내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다면 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형성에는 많은 다양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사회변혁의 원동력은 가정, 학교, 직장, 종교기관 등에서의 반복적인 인간관계에서 얻어진다고 한다.

사회규범은 사회의 힘있는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다. 20세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정부, 다국적 기업, 금융 및 재정관련기관, 언론 등이었다. 강자들의 논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의 전환도 이들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종교기관, 지역사회 집단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은 종래의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패러다임전환의 바람을 주도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윤리관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앞서 지적했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의 행동강령이 제정이 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지방정부들이 의제21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에도 절대 다수의 지방자치체들이 지방의제21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의제21이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행정의 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지방의제 21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행동지침으로서 각 지역사회의 주민, 기업, 정부의 공동작업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물론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수단이며, 틀이고 모델이 된다고 보아 그 활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들은 이 행동지침을 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실천주체들을 묶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운동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여론조사 등의 시작단계의 기초적인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서 한시 빨리 탈피하여 실천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직과 활동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이든 UNEP의 지구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for the Earth)의 소집단들이든 녹색소비자 연대가 가지고 있는 실천조직이건 간에 녹색생활문화를 견인해내는 힘의 원천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녹색생활 문화창달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등 3주체 각각의 기본 과제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영역(정부)의 과제는 ①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정책 마련(공급관리→수요관리, 사후대책→사전예방, 청정산업 및 녹색소비 촉진, 오염원은 발생원에서 대처 등) ②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지원책 마련 ③환경가버너스를 위한 행정체계 전환(분권화:중앙정부→지방정부, 광역→기초, 구·동 재정자립 등 자치능력 확보, 관 주도→민과의 협력) ④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기법활용은 정부가 솔선수범(환경마크제품 정부우선구매, 환경감사제도 우선실시 등) ⑤지방의제21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행정예 통합적으로 수용 ⑥지자체간,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 등

2) 민간영역(기업)의 과제는 ①지방의제21의 한 주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인 참여 이행 ②환경친화적인 경영, 생산, 유통, 폐기물 처리 이행 ③녹색소비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녹색구매지침 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④지속가능한 경제발전모델 개발 위한 투자 확대 ⑤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적극지원 등

3) 제3영역(시민사회)의 과제는 ①실천주체 기반조성에 지역사회 자원의 총동원(인력, 기술, 자원, 공간 등) ②실천기법 개발 및 보급 ③실천활동을 위한 거점 확보(기능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동회 활용 등) ④실천과 관련있는 기관(정부, 기업, 학계, 언론 포함)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소비를 줄이는 녹색생활 문화구축의 핵심과제는 오늘의 성장위주의, 물질위주의, 편의위주의 그리고 힘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반환경적인 文明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지속가능한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혁명은 종래의 기술의존적인 기술혁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나 욕망억제를 가능케하는 가치관, 윤리관 및 체제 변경을 어떻게 성취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로 세계의 환경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IV. WSSD 2002와 21세기의 지구환경문제의 숙제

2002년 6월에 개최예정이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세계 6억명(TV시청 연인원 600억명, 직접관람자 170만명 예상)의 인구가 열광하는 2002월드컵 경기에 밀려 9월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최를 환경부가 추진한 바 있음)

빈곤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회의는 '72 스톡홀름 인간과환경회의의 30주년, '92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10주년 그리고 '97뉴욕 유엔환경특별총회 5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지난 10년 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를 환경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170여개국의 정상급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학계 및 NGO대표 등 6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의제21의 정신에 따라 9개 주요 그룹과의 협력강화가 중심적인 운영원리로 작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부문별 준비활동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 회의는 4차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차원의 준비사항, 주요 집단의 참여방안, 저명인사 토론회의 내용을 점검하고 WSSD의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결의문 내용을 합의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회의들도 개최하고 있다. 준비회의 과정에서 사회풍조의 분석, 국가별 평가서들, 권역적인 점검사항들 시민사회와 국제기구들의 요구사항들을 참고하게 되며 1992년 이후 새로 부상한 세계화로 인한 제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된다.

유엔은 WSSD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각 나라에 국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게 이 기능을 맡기고 그 산하에 부문별 대책반을 두고 그 운영과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제21추진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산업계 준비위원회, NGO 또는 여성환경인의 준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청년, 노동계 등도 별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국가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 부분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보내는가 하면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준비회의에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팀을 파송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WSSD에서의 동북아 여성코카스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미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서 1차로 한,중,일 여성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국가준비위원회의 국내 대책으로는 리우+1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정책적용 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재세대인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접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업무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번 WSSD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은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양식과 관련돼서 열려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낙관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기대는 버릴 수가 없다.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를 흔히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19세기의 열강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공간지배의 정당성이 붕괴되면서 20세기는 국가마다 부를 추구하는 경제의 세기였다. 경제발전이 일정부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건인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60년대의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1970년대의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에서 펴낸 <성장의 한계>보고서, 1990년대의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폭로한 <도둑맞은 우리의 미래>와 오늘의 육식문화의 프리즘을 통해 현대문명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예고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탈유속

문명에의 도전(Beyond Beef)>등이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온에 의한 천재현상과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페르시아만 전쟁 등의 인재들이 잇따라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뒷전에 밀려 있던 환경문제가 현재는 국제정치 현안의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같이 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안되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21세기의 지구환경문제의 숙제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지구공동체인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구환경문제만큼 '충론찬성' '각론반대'가 현격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 또는 자국이 그 대처에 적극 대응하는 일은 별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20%의 세계인구가 세계의 80%의 지구의 자연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뒤따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자원다소비 생활양식 고집과 개도국의 선진국형 경제체제 추구 지속 그리고 후진국의 생존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대책 강구 등으로 남북간의, 국가간의 이해대립은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제정치, 경제체제에 의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남북간의, 국가간의 격차는 세계 도처에서 대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지난날의 이념갈등의 동서냉전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남북전쟁으로 바뀌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생태계의 보복으로 인류는 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서의 상호간의 일보의 양보도 없는 해결의 교착상태는 리우회의이후 10년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우+5였던 1997년도의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리우+10을 위한 지금까지의 준비회의에서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여러 면의 견해차이에서도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방법의 차이, NGO와의 파트너쉽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인 재정 및 기술이전 증대를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표명에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도출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들간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촉발제의 역할은 NGO가 담당해야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NGO는 시장원리의 한계와 정부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서이다. 우리나라의 NGO도 여기에 가담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그 선두에 나설 수도 있다.

WSSD가 지구환경문제의 딜레마를 풀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구정상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이 회의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어 있다.

V. 녹색생활문화와 녹색소비의제21

의제21은 '92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주류는 '72 스톡홀름의 인간과환경회의에서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그리고 '92 리우에서의 환경과개발회의에서는 G7의 선진국과 G77의 개도국간의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구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은 '92 리우정상회의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지나치게 편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WSSD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제형상하기 보다는 기존 의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제21의 의안 추가나 시각조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 의제21에서 누락되어 있는 의안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에서 틈새를 찾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의 특수성을 살려서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 필요로 하는 '준거물'과 기준을 서울대의 김귀곤 교수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매커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무대에서의 지금까지의 관망만하는 주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가담할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NGO는 시도해야 한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지구환경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세계의 주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①개발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신흥개발도상국(NIES-Newly Industrilifed Economics)들이 대거 이 지역에 포진하고 있어서이다. 일본(50년대), 싱가포르, 홍콩, 대만(70년대), 한국(70년대 후반), 태국, 말레이시아(80년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인도네시아(80년대말) 등이 신흥공업경제국가들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②아시아권이 세계인구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세계인구동향의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③이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현상, ④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엄청난 생산과 소비욕구 분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녹색소비와 관련된 문제로서 심각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중국의 13억(세계인구 25% 육박)인구의 소비양식의 변화에서 예상되는 대혼란이다. TV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소비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13일에서 15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일본, 한국, 여성환경인들이 WSSD준비의 일

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중국에는 민간단체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중국의 여성환경운동의 현황, 과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토론 국가별 발제를 한 리아오 셰리 라는 중견여성은 <북경 지구촌 환경문화센터>라는 민간단체의 회장이었다. 그는 이 회의의 첫 토의에서 30분간의 발표를 마치고 곧 귀국길에 올라야 할만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여성환경운동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가 황급히 귀국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환경운동을 위한 풀뿌리운동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라고 했다.

그의 발표내용의 골자는 중국이 자유경제체제를 수용함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13억 중국인의 폭발적인 소비풍조에서 빚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대로 세계인구의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문제와 소비문제는 환경관련 국제회의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의제의 하나이다. 얼마 전까지 자원소비가 억제되었던 중국의 전 인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최저생활자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45개의 지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비유는 오늘의 소비행태를 걱정하는 자리에서 들어오던 것이다.

리아오 셰리의 결론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오늘의 소비추세를 멈추지 않는 한 20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개의 지구를 더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오늘의 인류는 소비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비태도에 대한 현세대인의 자성을 촉구하며 의식혁명을 주창했다. 늘 환경인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욕망의 고삐가 풀렸다는 중국에서 온 여성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달랐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의 쟁점은 선진국의 생활수준과 발전도상국의 인구증가 문제이다. 최근에는 선발개도국의 경제개발의 추세와 양식이 추가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자원다소비국들의 소비양식을 문제삼는가 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며 서로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데서 환경개선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는 WSSD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극화 현상의 갈등이 해소되므로서 진일보한 지구환경가버넌스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시아권의 선발개도국들의 정부와 특히 NGO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그 폭도 넓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지구환경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에따라 감당해야 하는 책무도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1992년도의 월드위치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소비계층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다소비층 20% 중간계층을 60% 그리고 빈곤층을 20%로 보고 있다. 20%의 다소비층은 생존을 위한 자원의 절대 필요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20%의 빈곤층보다 자원을 수 십배 또는 수 백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원다소비층은 GNP가 7,500불 이상

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원다소비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유감인 것은 우리나라는 지구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나라로서는 세계8위인 반면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로서는 9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WSSD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구나 단체 또는 국가별의 목적이나 특수사정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선과제선정과 대책모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국 여성인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동북아권의 선발개도국과 선진국의 당면과제는 녹색생활문화를 위한 녹색소비 양식의 모델 개발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 문제는 WSSD에서 핵심과제이기도 한데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금까지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추가하고 <녹색소비의제21>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제안한다.

이 과제 수행은 단시일에 몇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제21의 수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파트너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작업은 상당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꾸준하고도 치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동북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후 WSSD에서 실천모델로서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제시에 불과하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백분 활용해서 녹색생활문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VI. 맺는말

금번 WSSD의 주제는 <빈곤문제>이다. 새세기, 새천년에 인류가 희망하고 있는 평화, 평등, 화해의 세계는 오늘의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대할 수 없는데서 이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서의 우선과제도 빈곤타파이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인간내면에 증오와 원한이 쌓이게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테러에 의한 대참사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증오와 원한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들도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세계인의 선망과 추구의 모델이었던 최강의 미국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부와 과학기술의 표상이었던 무역센터 건물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세계 인류는 문명의 위기를 우려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인류는 지구환경의 위기, 문명의 위기의 백책간두에 서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금번 테러사태에 즈음해서 미국 국민의 통합은 물론 반테러를 위한 세계인의 통합이 이

루어진 것을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다. 국민적인 통합은 사회발전의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문제는 통합으로 묶어진 힘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생활문화 구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억제를 가능케 하는 데에는 철학적인 정신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혁명이란 빅뱅(Big Bang)과 같은 대충격을 발판으로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전환의 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WSSD가 미국에서의 대참사의 충격속에서 준비되고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일찍이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의 밀레니엄을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21세기 벽두부터 세계전쟁의 위험, 환경악화, 인간불평등, 나아가서는 문명간의 갈등의 요인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세대인의 최대의 과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라는 과제는 지금부터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것으로